

“내란의 밤 진실 해명... 공개토론 하자”

민주 이원택 의원, 김관영 도지사에 요구

“내란방조 의혹 납득할 만한 해명 직접 나서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책임 회피에 급급한 김관영 지사의 ‘내란의 밤’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고 ‘행동하는 양심’의 가치로 전북의 대 전환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 직접 해명을 요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2024년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의 12.3 내란당시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전북도의 기록과 서류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 반해 전북도의 해명은 말로써 일관해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김 지사의 직접적인 해명과 이마저도 어렵다면 공개토론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는 12.3 내란의 밤에 민주당 정치인이 가져야 할 ‘행동하는 양심’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며 “김 지사가 민주당 당원의 일원이었던 내란 방조 의혹을 네거티브로 폄하할 것이 아니라 납득할 만한 해명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당 강령과 관련해 이 의원

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자주독립정신과 4·19 혁명, 부미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촛불시민혁명의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을 천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민주주의 정신은 그 어떤 정책 목표보다 우선되는 민주당의 근본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김 지사는 내란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를 네거티브로 폄하하며 공직자들을 방패막이 삼은 채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며 아쉬워했다.

특히 “내란의 밤에 김 지사는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로서 ‘행동하는 양심’의 길을 택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상황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민주당의 정체성에 맞는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또한 김 지사의 해명에 대해 “계엄 상황에서 행정안전부 지시가 있었는 데 도시사 보고가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시군에 출입 통제를 전파한 것은 위법한 지시를 따르며 내란에 순응한 것”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더구나 “준예산 편성 검토는 계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12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관영 도지사의 ‘내란 방조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제시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고 35사단과 협조체계 구축도 실제로는 계엄 체제로 전환된 지역계엄사령부와의 협조였다”며 사실상 내란 방조 행위를 지목했다.

이 의원은 “김 지사가 윤석열의 불법적인 12.3 내란에 저항하지 않은 배경에는 정통 민주당의 가치는 다소 다른 정치적 정체성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를 대표하는 도지사라면 불법적인 지시에 맞서 싸우는 것이 민주당 정치인

의 자세”라며 “민주당의 가치와 민주주의 정신을 지키는 ‘정통 민주당 이원택’으로서 전북의 대 전환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영술씨(전주시 완산구 중화1동)는 “이원택 의원이 주장하는 ‘내란의 밤’ 기록과 서류의 사실 전복도의 해명을 두고 도내에서 김관을 박이 많은데 김지사는 이를 선거 네거티브로 치부하지 말고 뚜렷하고 소신 있게 밝히고 공개토론하는 끝장토론의 장을 만들어 대응하는 것이 도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좋은 방법이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인구정책 전반 재정비 필요”

최형열 도의원, 도정질의서 지역 성장 해법 마련 촉구
시군 통합 모델 · 직업계고 교육 개선 필요성도 제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최형열 의원(전주)은 12일 열린 제4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질문을 통해 전북의 인구 감소 대응과 시군 통합, 직업교육 개선 등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전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자 쿼터를 배정받았음에도 실제 추천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비자 수요자 정보 접근성 강화와 민간대행사 중심 구조 개선, 타 지역 외국인을 전북으로 유입할 수 있는 전략 마련 등 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최근 광주·전남 등에서 광역 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전북의 대응 전략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 의원은 먼저 전북도의 인구정책 추진 체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정책 전반의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북이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약 1조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인구 감소세는 계속되고 있다”며 “단순한 예산 투입을 반복하기보다 정책별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정례적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신규 정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의 활용도가 낮아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정책 재설계를 촉구했다.

이유사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구조적 문제를 보여 주는 것”이라며 “직업교육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중장기적인 직업교육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만호 기자

민주 도당 공관위, 14개 시군 단체장 후보자 면접 | 전주시장 후보자 3명 포함 총 49명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윤준병)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운)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 심사를 위한 면접을 실시했다.

공관위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 동안 전북지역 14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진행했으며, 총 49명의 후보자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첫날인 11일에는 8개 자치단체에서 29명이, 12일에는 6개 자치단체에서 20명이 면접을 치렀다.

면접 대상 지역과 후보자는 △전주시 3명(국주영은·우병기·조지훈) △

군산시 8명(김갑준·김영일·김재준·나종대·박정희·서동석·진희완·최관규) △부안군 4명(권익현·김양원·김정기·박병래) △무주군 2명(윤정훈·황인홍) △고창군 2명(심덕섭·조민규) △순창군 2명(임종철·최영일) △임실군 6명(김병이·김진명·성준우·신대용·한득수·한병탁) △장수군 2명(양성빈·최훈식) △완주군 3명(서남용·유희태·임상규) △진안군 4명(동창욱·이우규·전준성·한수용) △익산시 3명(심보균·조용식·최정호) △남원시 3명(김원중·양충모·이정린) △김제시 3명(김영석·나

인권·임도순) △정읍시 4명(김대중·안수용·이상길·최도식) 등이다.

면접은 개별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자기소개와 공통질문, 개별질문 순으로 심사가 이뤄졌다. 후보자들은 1분 자기소개를 통해 주요 경력과 출마 배경, 지역 발전 비전 등을 설명했으며, 공관위는 공통 질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운영 방향과 지역 현안 인식,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리더십 등을 점검했다.

또한 개별 질문을 통해 지역별 주요 현안과 정책 공약, 발전 전략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했으며, 후보자 언론 보

도를 통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후보자의 입장을 직접 확인하고 소명을 듣는 등 도덕성과 책임감 검증도 함께 진행했다.

공관위는 이번 면접 결과와 기존 심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기초단체장 공직선거 후보자를 최종 선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면접에 응하지 못한 공천 신청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신청영 민주당 전북도당 홍보소통과장은 추가로 최고위 결정에 따라 실시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오만호 기자

“전북형 햇빛소득마을 모델 구축 시급”

김정수 도의원, 도정질의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은 12일 열린 제4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정책과 관련해 전북자치도의 적극적인 대응과 전북형 모델 구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2026년부터 전국 500개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해 추진하고 있음에도 전북자치도는 선도 모델과 목표 불발, 전담 추진체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했다.

이어 도내 12개 시군 261개 마을이 총 143.5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이를 뒷받침할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햇빛소득마을을 단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아니라 농촌 공동체 소득 창출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



한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발전 수익을 마을자치연금과 연계해 장기적인 연금 지급 구조로 설계하는 전북형 지속가능 모델 마련을 제

안했다.

또한 마을자치연금 활성화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함께 인허가 및 계통연계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하고, 정부 공모 단계부터 전북형 햇빛소득마을 통합 모델에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전북 축산연구소의 조직과 인력 부족 문제도 지적하며 소장 직급 상향과 정원 확대 등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만호 기자

군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의원 발의 건의안 등 가결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12일 제 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부터 시작한 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이 진행되었고, 의원 발의 건의안 4건 중 3건이 가결되었고 1건이 수정가결됐다.

환경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준공 이후 9년째 방치되고 있는 미장지구의 지하 공용주차장의 실태를 비판하며, 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극치이자 시민의 불편함에 눈감고 귀 닫은 공직사회의 인일한 복지부동과 책임 회피를 여실히 증명하는 사례라며 군산시의 각성을 촉구하며 △미장 지하 공용주차장의 즉시 개보수로 시민들에게 환원 △관리 주체의 명확화 및 스마트 운영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날 시의회는 ‘지역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간이과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국가철도공단 옛 군산 화물역 철도 유휴부지 민간 개발 중단 촉구 건의안 등을 가결시켰다.

김경구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280회 임시회의 시정질문 당시 시장의 답변이 실제 현장에서 계약 행정의 위법적 관행을 낳고 부형성을 높여준데 충분한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군산시장 권한대행에게 물었다.

/군산=김만호 기자



“타운홀미팅 · 현대차그룹 투자협약 후속대응” 12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브리핑룸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타운홀미팅 및 현대차그룹 투자협약 후속대응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주-김제 통합시 출범 지지” | 전주-김제지역 청년들 청년 미래 위한 선택 강조

전주와 김제 지역 청년들이 전주·김제간 행정통합을 지지하며 전북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통합시 출범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김제청년연합 소속 회원은 12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의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 청년 일자리 부족 등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전주와 김제의 행정 통합이 필요하다”며 전주김제통합시 출범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주와 김제 지역 청년들이 참석해 “청년이 떠나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주·김제 통합은 반드시 필요한 선택”이라며 김제시의회의 행정 통합 추진 결정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전주시의회에 대해 김제시의회와 공동으로 전주김제 통합 건



전주김제청년연합 소속 회원들이 12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의서를 조속히 정부에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청년연합은 통합시가 출범할 경우 △청년 일자리와 창업 생태계 확대 △피지컬AI·물류·항만·바이오·에너지 산업 연계 신경제 구조 형성 △백

산 고속철도역 신설을 통한 수도권 1시간대 연결 △대형 기업과 공공기관 유치 확대 △새만금 신항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물류 거점 도시 도약 등 다양한 발전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오만호 기자

“남원 농업 경영안전망 강화”

양충모 남원시장 예비후보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남원시장 예비후보로 나선 양충모 후보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예비후보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물론 지역내 총생산(GRDP) 약 2조원 정체를 평지 벼농사 중심의 농업생산구조, 축산 원예 등 고소득 작목로 전환하는 해발 50m~500m의 입체적 지형구조를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 전략 필요하며, 농생명산업 선도지구 정책지원을 중소규모 농가, 지역별로 확산하고, 농생명 산업의 지속적 지원 육성, 자립기반 확충, 강소농 육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남원시는 그동안 농업예산의 규모는 일정수준 유지, 시 전체예산 증가로 비중은 감소 추세였으며, 소득 보전을 위한 농업 경영안전망을 강화하고, 로컬푸드, 융복합 농업 생산공급원, 소규모 파수, 원예분야의 노동력 절감 스마트팜 개선 및 지원범위 확대, 축산 분뇨 처리 및 악취 저감 가축방역 등 시육기반 현대화 사업 지원 강화함을 밝혔다.

또한 체류형 농촌보급지리 주택단지 조성, 청년농업인구 육성 및 정착 지



원, 공공형 계절근로자 공급지원센터 확대 운영, 주민자치 및 기본소득 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마을별 시범사업 지원을 통해 모두가 잘살고 행복한 남원만들기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기자

최정호 익산시장 예비후보 내일 선거사무소 개소식

더불어민주당 최정호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오는 14일 익산시 무왕로6길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선다.

최 예비후보는 이날 개소식에서 출마 배경과 의미를 설명하고 시민 및 지지자들과 소통하며 익산 발전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오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익산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과 도시 대전환을 이끌겠다는 구상을 밝힌 계획이다.

/오만호 기자 · 익산=이재춘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